

高물가속 축산물 가격 들썩...수출 차질도 우려

구제역 이후 소고기·돼지고기 가격 상승세 야외 활동 증가 및 단기간 공급 차질 분석 WOAH,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힘들 듯

4년여 만에 찾아온 구제역으로 축산물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공급 부족으로 먹거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우 수출 판로를 확대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총북 청주시 및 증평군 한우 농장 10곳과 염소 농장 1곳 등 총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목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국내 발생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18일 기준 kg당 1만6058원으로 구제역 발생 전인 10일(1만4999원)보다 7.1% 올랐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 11일 kg당 6380원으로 한 달 전인 4월 12일(5356원)보다 19.1% 뛰었다. 이후 지난 18일 kg당 5928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은 kg당 2만6340원으로 지난달 24일 이후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달과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소비가 늘어남에 이어 정부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우제목류 이동 제한으로 단기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낮고 살처분 마릿수도 미미하기 때문에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부실 접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확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제역이 더 번질 경우 가뜩이나 오를 대로 오를 정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통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물가는 지난 2월(-2.0%)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지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산 쇠고기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내려갔다.

한우농장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하면 소고기 공급이 막히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실제 전국에서 소·돼지 350만 마리를 살처분한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고기 가격이 40% 이상 폭등한 바 있다. 반대로 구제역 발생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한우 수요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전체 소비자 물가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한다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가 다시 꿈틀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2011년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전환한 다음 2014~2019년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소공급에 영향을 줄 만큼 살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살처분도 소고기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 가격의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 한우 수출 판로를 확대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어 올해 한우 수출량을 지난해(44t)의 5배 수준인 200t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 직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청정국 지위 회복은 무산됐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제역 비 청정국은 청정국으로 한우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한우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청정국 지위 획득을 전제로 수출을 논의 중인 싱가포르, 베트남 등으로의 한우 수출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현재 소고기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소고기들을 말레이시아에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변용일 기자



서울·수도권 줄고, 지방 늘고...미분양 양극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1개월 만에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선 쌓이는 미분양 물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물량 자체는 7만 가구를 넘어 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계획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만 5949가구로, 지난해 말 조사한 4월까지의 분양 계획 물량의 29%에 불과하다.

10대 건설사는 올 한해 전체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 27만8958가구 중 절반이 넘는 14만6382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5대 광역시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나누면 대구가 1만3199가구로, 절반이 넘는 수준인 56.9%를 차지했다. 대구는 전국 광역시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1만1034가구)을 뛰어 넘었다.

또 인근 경북(9016가구) 지역까지 합산하면 전국 미분양 물량의 30.8%가 대구·경북 권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선 지난 2021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들이 속속 미분양되면서 물량이 쌓이고 있다. 1만 3000가구나 되는 미분양 아파트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꺾여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집중됐지만, 분양가가 꾸준히 오른 것도 한몫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지역 수요를 무시한 과잉 공급이 이뤄진 게 기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은 대구, 충청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지역은 의미 있는 만큼 미분양이 늘지는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대구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고 지역 수요를 무시한 과잉 공급이 이뤄진 게 기본적 문제"라며 "공급 속도를 조절해 시간 두고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건설사 대부분 시공순위 10위 내 기업들이어서 충분히 버틸 만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미분양 물량 증가로 건설사들의 출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면 건설업체 자금줄이 막히고, 이는 금융권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은 이미 업계에 도태됐다"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 만큼, 지방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나 취득세 면제 등을 미분양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자구책과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건설사들의 유통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통성 위기는 결국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미분양 물량이 쌓인 대구 등 일부 지방을 한정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정책적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들 역시 분양가 낮춰서 미분양 물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인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도미노피자-슈퍼마리오 협업... '캐릭터 마케팅'

유통가의 캐릭터 굿즈 마케팅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업계는 슈퍼마리오·산리오 등 동심을 자극하는 캐릭터 굿즈를 부수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며 어린이는 물론 키덜트족까지 사로잡고 있다.

먼저 도미노피자는 지난 4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와 협업을 기념해 피자 3종과 사이드 디시 2종을 출시한 바 있다.

이어 이달에도 '슈퍼마리오 굿즈 스페셜 딜' 프로모션을 2차례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슈퍼마리오 굿즈와 코카콜라를 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월1일까지는 2차로 '슈퍼마리오 드라이브'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다. 모든 프리미엄 피자(L) 및 슈퍼마리오 무비 에디션 피자(L) 구매 고객은 '슈퍼마리오 드라이브'와 코카-콜라를 4,900원에 만나볼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주문 모두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세븐일레븐은 단독 기획으로 산리오캐릭터가 그려진 리유저블백을 출시했으며, 일주일 만에 3만 개가 판매되며 조기 품절 조짐을 보인다.

산리오 캐릭터는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시나모롤 등 일본 최대 캐릭터 브랜드 '산리오'에서 탄생한 캐릭터다. 최근 국내에서 여러 브랜드와 IP 협업을 이어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 선보인 리유저블백은 헬로키티와 마이멜로디 등 산리오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적용됐으며, 재생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의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상의 여성 고객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에서 산리오 캐릭터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매주 청파도 캐릭터가 그려진 리유저블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640ml 용량의 맥주 3병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판다 캐릭터 '따오'가 그려진 '따오 리유저블백 세트'와 교환할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홈플러스, '대형마트의 역습' 생크림빵 경쟁 참전 부상하고 있다.

1일 모델이 홈플러스 몽블랑제 '생크림빵단팥빵'을 선보이고 있다. '반갈삭(빵을 반으로 갈라서 인증하는 사진)' 유행을 타며 '생크림빵단팥빵'이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펫닥터에 시터까지...유통가, 반려동물 서비스 확대

쿠팡, 수의사 상담 후 구매 연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이른바 '펫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유통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반려동물 건강 상담과 사료 등 구매를 연계하는 '로켓펫닥터'를 도입했다.

로켓펫닥터는 수의사가 반려동물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사료나 리포트 등을 답변 받는 서비스다.

쿠팡 애플리케이션 로켓펫닥터 테마관을 만들었고, 쿠팡 검색창에 '사료'를 검색해도 배너로 들어갈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반려동물 프로필을 등록하고 건강질문에 답변하면 10분 후 리포트가 나온다. 건강 점수, 일상 조언, 관리 가이드 등을 참조하면서 적합한 사료 구매를 안내한다.

편의점에서도 펫 관련 서비스 도입 움직임이 있다.

편의점 GS25는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업체인 와요와 협업해 쿼알(QR) 코드로 돌봄 및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먼저 돌봄인 펫시터 서비스는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 12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반려 동물을 봐주는 프로그램이다.

돌봄은 맞춤 배식·놀이·산책·위생 관리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모든 돌봄 과정은 와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펫훈련 서비스는 인증과 검증을 거친 전문 훈련사가 직접 가정을 찾는 방문 교육, 비대면 화상 교육 2종이다.

훈련사는 사회적 훈련, 배변 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법을 알려준다.

유통업체에서 반려동물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펫족 증가에 따른 맞춤형 접근으로 보인다.

뉴시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13~26일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이다. 여기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75.6%는 개, 27.7%는 고양이를 키운다고 답했다.

뉴시스